

병력 대신 군무원으로 채워지는 연병장... 약병화 현실로

국방부 22~26 국방중기계획 발표

5년 뒤 육군 3만명 이상 줄어
초급간부·민간인력 대응 방침
軍 일각선 예비군법 개정 주장



지난 3월 3일 경북 영천에서 열린 육군3사관학교 제56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입장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가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2~26국방중기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병력의존율을 낮추는 군구조 개선이다. 그렇지만, 다가올 인구절벽에 대비한 장기적 시각보다 근시안적 시각에서 계획이 수립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315조2000억원, 이 중 병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208조5000억원으로, 무기 구입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06조7000억원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각에서 첨단전력을 도입하는 방위력개선비보다 병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 비중이 높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미래 국군의 효율적 운영은 인재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병력부족 해소, 미숙련 초급간부와 군무원 증원으로 어려워

현재 주세를 보면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급감으로 5년 뒤 육군은 3만명이 감축된다. 이번 계획에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여군을 포함한 초급간부와 민간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군에 유입되는 현상만 본 것이라 장기적으로 볼 때 '차질미달 간부'의 유입이 우려된다.

군당국은 지난 2016년 병력자원 고갈과 관련해 당시 기준으로 35만명의 20

세 남성 인구가 2022년에는 25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방계획 2020에 따라 전체병력을 25만명으로 줄여도 매년 2만~3만명이 부족하게 된다.

국방부 이러한 병력 부족을 여성을 포함한 초급간부와 비전투분야의 군무원으로 매우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을 일자리 창출과 연결지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조직 편성 등의 업무에 밝은 고위직 퇴역 장교는 "군으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청년인

구 감소는 민간에서의 구직난을 동반하게 되는데, 민간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군 간부를 택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 퇴역 장교는 "낮은 처우와 직업적 안정성 보장이 어려운 군의 특성상, 군에서 육성된 우수자원은 소방과 경찰 분야로 이미 넘어가고 있다"면서 "군이 소방과 경찰의 예비학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군 당국이 2017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3건이었던 군간부 사고는 2017년 22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간부의 비중을 높여더라도 우수한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더 위험한 '약병화(弱兵化)' 현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간부 자질 저하 예방, 숙련인력 육성과 보존이 필요

육군과 함께 심각한 병력부족 현상이 시달리는 해군의 경우 간부 선발시험 요강을 완화하고 있다. 지난 1일 해군은 해군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부사관의 경우 1차 필기 시험에 포함된 영어시험이 부사관 제

275기 모집부터 폐지된다. 국사시험은 장교와 부사관 모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로 대체돼 문턱이 낮아진다.

국방부는 부사관 등 간부는 전투분야에 집중시키고 비전투분야에는 민간인인 군무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큰 함정이 숨어있다. 전투분야의 부사관의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은 군사경험이 없는 민간 지원자보다 군사복무 경험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군은 여성을 중심으로 한 민간 지원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군무원의 경우 전쟁법상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전후방의 구분이 없는 현대전의 양상에서는 생존성과 활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군 일각에서는 "군사경력을 갖춘 병이 부사관과 장교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군사경력과 민간경력을 갖춘 간부 중심의 우수 예비전력을 퇴역시기가 넘어도 안전정도로 동원할 수 있도록 현행 예비군법과 군인사법을 개정해야 예산대비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중소 건설·제조업 현장, 절반이상 안전조치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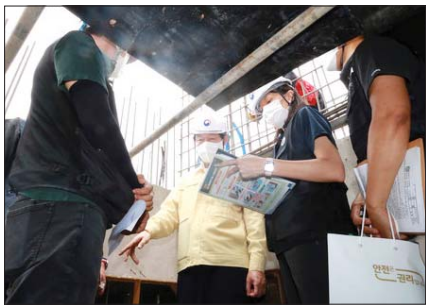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제조업 건설업 현장 점검 전체 64.6%, 7995개소 시정 조치

중소 규모 건설·제조업 현장 10곳 중 6곳은 추락과 끼임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현장에서는 보호구를 쓰지 않거나 안전간이 없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1만2300여 개의 중소 규모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한 7995개소(64.6%)를 시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후 고용부는 추락과 끼임 사고로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소재의 A 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67.5%, 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을 현장 점검 중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조업은 58.1%가 안전 조치가 미비해 지적을 받았다.

건설업의 경우 5718개소 현장에서 1만6987건의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2197개소에서 5694건을 지적받은 제조업보다 3배 가량 많았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지적받은 비율도 건설업(4834건)이 28.5%로 제조업(568건) 10.3% 보다 2배 넘게 높았다.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16.2%) 순으로 많았다.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14.9%)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사망사고가 많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시범 점검도 이뤄졌다.

폐기물 처리장 116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비율은 69.0%로 건설업·제조업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붕개량공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설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과정에서 올해에만 30명이 추락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별목 작업 도중 사망사고도 올해 8월까지 1년 간 11명으로 전년 4명 보다 증가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광해광업공단 설립 막바지... 10일 출범

산업부 7차 설립위원회 개최

의결 주요사항 황규연 사장에 인계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합해 설립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막바지 설립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일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 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사항을 황규연 선임 사장 내정자에게 인계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설립위는 지난 4월 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개월간 총 11차례 위원회와 8차례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신설공단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심의·의결했다.

신설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유사·

중복기능을 통합하고 조직 안정화를 주요내용으로 사업조직을 개편해 57개 구조에서 46개 조직으로 약 20% 효율화했다. 구 광물자원공사의 국내본부와 해외본부 2본부를 광물자원본부 1본부로 통합하는 한편, 광해본부와 지역본부의 역할은 확대했다.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통해 법 시행일인 9월 10일에 맞춰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사옥은 구 광물자원공사 사옥으로 해외사업관리단을 제외한 신설공단 전체 인원이 배치된다. 신설공단 출범식은 정관인가, 설립등기 등 준비기간을 거친 뒤 9월 15일 개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표원, 혁신기술 中企 국제표준 도전 지원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 국제표준 전문가 1대1 매칭

혁신기술 개발에 성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제표준 제정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제표준 전문가를 1대1로 매칭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 17개사와 국제표준 컨설턴트 17명을 매칭하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 협약을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혁신기

술을 개발한 기업에 해당 분야 국제표준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제표준 컨설턴트들은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표준안 작성과 검토, 관련 정보 수집,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작년에 시작돼 올해로 2회차다.

올해는 지난 5월 실시한 공모를 통해 국제표준화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이 큰 17개 혁신기술 개발 기업을 지원대상으

로 선정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리튬 이차전지의 안전성, 내구성 향상을 위한 '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에 대한 반복 하중 물성평가 기술'을 개발한 ㈜탑앤씨, 디스플레이 분야는 새로운 전시, 광도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투명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모듈 평가기술'을 개발한 ㈜글로우원이 참여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고압 수소 저장용기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아이디케이 등 3개 기업이 참여하고, 드론 분야에선 '복합재난환경 운용 드론의 내열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엑스드론, 스마트팜 분야는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기술'을 개발한 ㈜나침메이커앤드론이 참여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개 드는 조류 AI... 닭고기·계란 값 비상

(인플루엔자)

농식품부-환경부 야생조류 관리강화

최근 유럽과 아시아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 유입이 우려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닭고기와 계란 값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상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유럽 야생조류 AI 발생건수는 113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6건) 대비 무려 44배나 급증했고, 8월까지 13개월간 지속 발생하는 등 AI 발생 기간도 전년(3개월) 대비 대폭 늘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도 7개국

44건이 발생해 전년(2020년 6월까지 14건) 대비 3.1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 4월엔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랴오닝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I 바이러스 유형(형질형)도 다양해졌다. 지난해 유럽에선 H5N8형(1종)만 나왔으나, 올해는 H5N8(80.1%), H5N1(8.4%), H5N5(3.9%)형도 검출돼 예년보다 다양한 6종의 AI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올 겨울 국내 야생철새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즉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발생 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 출입통제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